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0. . .<br>(제 회)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총리<br>(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 제출 연월일 | 20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자발적 상생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2019. 12. 16.)의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활성화(안 제9조의2제3항 제2호, 현행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 삭제)

- 1) 현행 시행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에 해당하고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60일이 경과’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임.

- 2)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자 함.

나. 벌점 경감사유 및 경감폭 조정·정비(안 [별표3] 3.가.1)·7), 현행 [별표3] 3.가.2)·3)·5) 삭제)

- 1) 현행 하도급법령은 범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이수, 표창 수상 등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고, 표준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항목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이중으로 벌점이 경감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 2)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등 벌점 경감사유 및 경감폭을 조정·정비하여, 벌점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다. 피해구제 등 관련 벌점 경감사유 신설(안 [별표3] 3.가.5)·6)·8))

-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위반 사업자의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있으나 제도 운영이 중단된 경우가 있고 별점경감 사유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2) 피해구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별점 경감사유를 신설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라. 입찰정보공개 관련 별점 경감사유 신설 (안 [별표3] 3.가.3) 신설)

- 1) 현행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위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쟁입찰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원사업자가 입찰종료 후 추가협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2) 공공·민간 발주 공사에서 경쟁입찰 결과(최저 입찰금액, 낙찰금액)를 공개하는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건설업자에 대해 별점을 경감함으로써, 원사업자들이 입찰결과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마. 별점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정비 (안 [별표3] 3.가.다)

1) 현행 시행령은 벌점 경감사유 판단시점을 ‘사건인지일 직전 사업연도’와 ‘시정조치일 직전 1년’으로 이원화하고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을 포함하여 누적벌점을 계산하고 있어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제한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벌점이 소멸되는지 여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2) 벌점 경감사유 판단시점을 최근 시정조치일의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하고,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건, 이미 입찰참가제한 등의 요청이 이루어진 사건은 원칙적으로 누산벌점 산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바.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확대(안 제2조제4항)

1) 현행 시행령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동 기준이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97년, 건설위탁의 경우 '05년에 정해진 것이어서 그 동안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을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자 함.

사. 관계 부처간 협력 활성화 (안 제17조의2)

- 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및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명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법령상 근거가 없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2)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명단을 통지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사업자에 대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 건설위탁 지급보증기관 확대(안 제8조제2항제5호)

- 1) 현행 하도급법령은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법 등 건설 관련 법에 따른 공제조합을 보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공제조합은 보증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기관에 포함시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보다 폭넓게 보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진행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진행예정(2020. 3. 27. ~ 5. 6.)

3) 규제심사 진행예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대차대조표에”를 “재무상태표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20억원”을 “3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억원”을 “45억원”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대금”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를 “자가”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제9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6

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게 모범적으로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자(법 제3조의3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 상습법위반사업자 등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지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사업자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사업자 명단, 조치를 취한 시점,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 등 반기별 조치 내역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나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라. “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범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마. “현금결제비율”이란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결제액(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바. “입찰정보공개비율”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건설위탁 관련 하도급계약 건수 중 하도급 입찰에 참가한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입찰결과(최저 입찰금액, 낙찰금액)를 입찰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공개한 건의 비율을 말한다.

##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

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 3) 시정권고: 1.0점
-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 5) 시정명령: 2.0점
- 6) 과징금: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3항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 7) 고발: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3항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3.1점으로 한다)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위반한 경우
-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제7항을 위반한 경우
-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3조의4,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다.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벌점을 0점으로 한다.

1)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미지급금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2)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합의내용을 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6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 벌점의 경감·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으며, 경감기준 충족여부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의 시정조치일(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을 말하며, 이하 “최근 시정조치일”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8) 충족여부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각 사건별로(의결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 위반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원사업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변경 또는 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최신 개정본을 배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최신 개정본을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되어 5)에 따라 벌점을 경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중이 80% 이상: 2점

나)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중이 50% 이상 80% 미만: 1점

2)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되어 5)에 따라 벌점을 경감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가) 현금결제비율 100%: 1점

나)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0.5점

3) 원사업자가 법 제2조제9항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고,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입찰정보공개비율 80% 이상: 1점

나) 입찰정보공개비율 50% 이상 80% 미만: 0.5점

4)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 법 제3조의3에 따라 수급사업자 또는 협력사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가) 최우수: 3점

나) 우수: 2점

다) 양호: 1점

5)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평가에서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법 제3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아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 3점

6)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에서 우수 등급(AA) 이상을 받은 경우

가) 최우수(AAA): 2점

나) 우수(AA) : 1점

7)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법 제1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가)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대금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1점

나)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대금의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0.5점

8) 원사업자가 자신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해구제 규모가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감 비율을 결정하며, 제2호가목에 따라 반영한 가장 중한 시정조치가 같은 목 1)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별점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별점의 100분의 25 초과 100분의 50 이내

나)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50% 이상을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별점의 100분의 25 이내

나. 별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직전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다목1)에 따라 별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별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별점에 가중한다.

다.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목의 항목마다 1회만 별점을 경감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별점을 누산

점수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 1)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벌점
- 2)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과거에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에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 3)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과거에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영업정지 요청에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의 소급효)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이 원 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가 이



수한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표창, 사업자가 실시한 전자입찰에 대한 벌점의 경감기준의 적용은 별표 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br>(생략)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br>(현행과 같음)   |
| ②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u>대차대조표</u> 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의 <u>대차대조표</u> 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 ② -----<br>-----<br>-----<br>----- <u>재무상태표</u><br><u>에</u> -----.<br>-----<br>-----<br>----- <u>재무상태표</u> -----<br>-----. |
| ③ 삭제  | ④ -----<br>-----<br>-----<br>-----<br>-----.   |
|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 1.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br>연간매출액이 <u>20억원</u> 미만인<br>중소기업자  | 1. -----<br>----- <u>30억원</u> -----<br>-----   |
|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u>30억원</u> 미만인 중소기업자   | 2. -----<br>----- <u>45억원</u> -----<br>--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   |
|--|---|
| <p>⑤ ~ ⑧ (생 략)</p> <p>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 5. (생 략)</p> <p>6. <u>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u></p> <p>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p> <p>1. ~ 6. (생 략)</p> <p>7. 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 <p>⑤ ~ ⑧ (현행과 같음)</p> <p>제3조(서면 기재사항) -----<br/>-----<br/>-----<br/>-----.</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하도급대금</u> -----<br/>-----<br/>-----<br/>-----</p> <p>제6조(서류의 보존) ① -----<br/>-----<br/>-----<br/>-----<br/>-----<br/>-----<br/>-----<br/>-----<br/>-----<br/>-----.</p> <p>1. ~ 6. (현행과 같음)</p> <p>7. -----<br/>-----</p> |
|--|---|

|  |   |
|--|---|
| <p><u>자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u></p> <p>가.·나. (생략)</p> <p>8. (생략)</p> <p>② (생략)</p> <p>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생략)</p> <p>② 법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5. (생략)</p> <p>③ ~ ⑥ (생략)</p> <p>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등) ①·② (생략)</p> <p>③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 <p>-- <u>자가</u> -----</p> <p>-----</p> <p>-----</p> <p>-----</p> <p>-----</p> <p>가.·나. (현행과 같음)</p> <p>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br/><u>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p> <p>-----.</p> |
|--|---|

1. (생략)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가장 최근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자

④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1. (현행과 같음)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삭제>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동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입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

<삭 제>

|  |  |
|--|--|
| <p><u>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br/>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u></p> <p>⑥·⑦ (생략)</p> <p><u>&lt;신설&gt;</u></p> <p><u>제17조의2</u> (생략)</p> | <p>⑥·⑦ (현행과 같음)</p> <p><u>제17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br/>협조 등) ①</u> <u>공정거래위원회는<br/>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br/>정기관에게 모범적으로 하도급<br/>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자(법 제<br/>3조의3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br/>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를<br/>포함한다), 상습법위반사업자<br/>등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지받<br/>은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사업<br/>자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br/>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br/>할 수 있다.</u></p> <p><u>③ 관계 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br/>라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사업<br/>자 명단, 조치를 취한 시점, 구<br/>체적인 조치의 내용 등 반기별<br/>조치 내역을 매 반기 종료 후 1<br/>개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br/>통지하여야 한다.</u></p> <p><u>제17조의3</u> (현행 제17조의2와 같<br/>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
| 연 락 처           | (044) 200 - 4584 |